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수억원대 횡령 사건 발생

# “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기강확립 철저히”

김희수 도의원 “교육감 임기말 발생한 레임덕 징조  
행감 통해 교육행정 전반의 잘못된 관행 밝힐 것”

완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수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김승환 교육감의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교육위원장(전주 6)은 8일 전북도의회 제38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교육청 공직사회 투명성, 신뢰성, 기강 확립 철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수 의원은 발언에서 “우리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 그중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위 행위라는 점에서 사



태의 심각성이 더하다”면서 “교육위원장으로서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횡령 사건은 이번 횡령 사건으로 그간 전북교육청이 쌓아온 청렴이라는 공든 탑이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김승환 교육감 3선 임기말에 발생한 레임덕 현상의 징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재까지 피악된 경황상, 개인의 일탈이나 특정지역민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면서 “회계업무 보조자인 해당 공무원의 업무는 반드시 상급자의 권리·감독이 뒤따르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자에 불과한 직원에게 회계업무를 떠넘기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권리자의 업무태만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공금관리 실태와 회계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의 권리·감독 소홀과 잘못된 관행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성경찬 도의원, 낚시 관리·산업육성 조례안’ 발의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행정자치위원회, 고창군1)이 ‘전라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전북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은 무분별한 수산 자원 남획을 예방하고, 견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북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견전한 낚시 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 행하도록 했고, 행정·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비롯해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사업,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 낚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성경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견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되고, 도내에서도 관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충전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문화·예술·체육·안전 등 주요 현안 논의

### 도의회 문건위, 의정자문위원회 회의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문화건설안전위원 및 의정발전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것이며, 의정발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개선책을 마련해 도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발전자문위원회’는 도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협치를 통한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대학교수·관광협회 회장 등 이론 및 현장의 전문가들로 지난 2020년 7월 구성됐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활동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정례회 5분 발언

### 민간영역 효행 장려 실천 체계화

#### 최영규 도의원,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촉구



화적 변동이 효행에 담긴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를 촉발했고, 전통적 가치관의 붕괴가 존속범죄와 같은 비극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 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영규 의원은 “민간 영역에서 일부 효행 장려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서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적 실천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고 지적하면서 “효문화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민관의 협업체계를 조직화하고, 나아가 효 문화 확산과 세대갈등이라는 초고령사회의 사회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09년 전라북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2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조례에 설립근거가 있는 효문화지원센터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 전북 지역개발채권 면제 검토해야

### 진형석 도의원 “리스기업 유치 통한 세수 확충 위해”



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면서, 타 시·도의 경우 리스기업 유치를 통한 취득세 등 세수 확충을 위해 매입면제 및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북도에 등록해야 할 신규차량 및 리스차량이 타 시·도로 이탈 세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 2013년 JB우리카페 탈은 본사를 대구에서 전주로 이전하였지만, 자동차 리스사업 신차등록에 따른 취득세(도세)는 전북도가 아닌 채권 매입률이 낮은 타시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형석 의원은 “일부 시·도의 공격적인 공체 매입 면제 혜택으로 도내 차량 등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결국 취득세 세수가 많이 주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원은 “공체 매입면제 및 리스기업유치 전담조직”을 통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취득세 등 세수 확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회복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